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10. 15.(금) 08:3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담당자	하다애 사무관 daae0517@korea.kr 이재현 사무관 jaeheon7@korea.kr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장 이차웅 (044-215-2810)		김태순 사무관 tskim07@korea.kr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장 김희재 (044-215-8590)		이지은 사무관 je0605@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이보인 (044-960-6160)		신대원 서기관 recallme@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장 김우철 (044-960-6170)		임규진 사무관 newsy19@korea.kr

제목 :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의 겸 정책점검회의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의 겸 정책점검회의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①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점검(복지부, 제목만 공개)
- ② 고용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고용부, 제목만 공개)
- ③ 국민비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행안부, 제목만 공개)
-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해수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환경부)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외식분야	(농식품부)	행정분야	(행안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통계청)
교통분야	(국토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개최배경 】

제35차 정책점검회의¹⁾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의 회복²⁾(Recovery “During” a Pandemic)이라는 IMF 세계경제전망(WEO)의 진단처럼
금번 위기는 위기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위기와 함께 회복한다는 점에서
과거 여타 위기와 차별화 된 특징이 있습니다.

보건과 방역 이슈(Health Concerns)로 인해
정상적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공급망 차질(Supply Disruptions),
인플레이션 압력(Price Pressures) 등
회복 과정에서 동반되는 하방 리스크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위기로 발생한
ILO 추산³⁾ 전세계 2억5천5백만 명의 일자리 감소 충격이
국가별, 산업별로 다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일자리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세심한 정책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2) IMF 세계경제전망 (WEO, '21.10.12) : Recovery During a Pandemic
- Health Concerns, Supply Disruptions, Price Pressures

3) ILO('21.8.20) -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1: Trends 2021

따라서 정부는 위기와 함께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일자리 회복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각지대 축소 노력을 강화하고
금번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의 한시적 완화 연장 운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고용동향에 대한 연령별·업종별 분석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및 취약업종 고용유지 지원,
전국민 고용안전망 안착, 민간 일자리 창출 뒷받침 등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전개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충격 완충 및 재기지원에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위기 전 일자리 수준으로의 회복을 통해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이러한 정책의지를 담아

- ①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점검하고,
- ②고용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
- ③국민비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점검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관련입니다.

생계급여는 생계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으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대상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이 있어 많은 수급자가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존재로 인해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17.11월부터 장애인가구, 어르신·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금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 예정이었으나 금년 2차 추경 반영을 통해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실시하면서 사회안전망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꾸준히 증가⁴⁾하고 있으며, '17년부터 추진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⁵⁾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제도 관련입니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총수급자(만명): ('17)158→('21.8월)232,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17)3.1→('21.8월)4.48

5) 생계급여 수급자(만명): ('17) 123 ('20) 130 ('21.8월) 144

이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처방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 어려움 완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재산기준 등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예산규모와 지원건수('19년 33.7만→'20~'21.8월 126.3만건)를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한시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꼭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 빈틈없고 촘촘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입니다.

정부는 상생국민지원금과 병행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296만명)대비 95%인 281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여 연락가능한 모든 분들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혹시라도 추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연말까지 지속 발굴하여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 고용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 】

두 번째 안건은 고용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입니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67.1만명 늘어나고
전월대비 고용도 +5.5만명으로 8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5.4만명이 추가로 고용시장에 복귀하면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20.2) 취업자수와 같아집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 고용률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청년층과 30대 고용회복이 두드러졌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 상승폭이 확대(8월 +2.3%p→9월 +3.2%p)되었으며
특히,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0대 고용률(58.8%)은
'00.5월 이후 최대폭(+3.3%p)으로 증가하며
위기 이전인 '19.9월(58.6%)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용회복이 더뎠던 30대도
9월 고용률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큰 폭(+1.3%p)으로
증가하며 회복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13.9만명)에 따른 취업자 자연감소(△10.5만명)를 고려한
실질적 취업자수도 +9.3만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층, 30대 등의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 고용률(67.2%)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가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증가세가 지속·확대되는 가운데
운수·창고업은 근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면 서비스 비중 높은 분야 중에서는
교육업의 증가폭이 확대(+5.1 → +9.8만명)되었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었던 숙박음식업은
증가 전환($\Delta 3.8 \rightarrow +3.9$ 만명)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업종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대의 고용지표 개선과
우리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고용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민 70% 백신접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도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 속에서 고용회복의 온기가
전 연령·계층에 고루 퍼지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앞당기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 일자리 사업 집행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이와 함께, 민관합동 「청년희망ON 프로젝트」,
민간주도 SW 인재양성 확대 등 20~30대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국민비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비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민비서 구뵀⁶⁾은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주고, 궁금해하는 질문 사항을 상담해주는 온라인 개인비서입니다.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등 생활정보 7종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시작하였고, 5월에는 전자통관 민원, 자연휴양림 민원 등 11종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챗봇 서비스도 제공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코로나백신 1·2차 접종예약 확인과 1일전 사전 안내, 당일접종 주의사항 및 3일 후 이상반응 대처방안 등 백신접종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께서 접종을 차질 없이 받으시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6) 2020년 9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비서 서비스의 줄임말인 “국비”를 발음하기 좋고, good+비서의 의미를 포함한 “구뵀”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결정

또한 9월부터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복지멤버십(기초연금 등 맞춤형 급여)을 안내하고,
국민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여부, 신청기간·방법 등을 미리 알려드려
국민비서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1,300만명을 넘었고,
2억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개인비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비서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휴면예금 안내 등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종⁷⁾,
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챗봇 상담서비스 11종⁸⁾을 추가하는 등
국민비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채널을 추가하는 한편,
교통질서 안내장 등 고지서에 대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는 등
국민비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 맞는 개인 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를
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백신접종, 교통과태료 등 8종('21년) → 전기요금, 휴면예금 안내 등 30종 추가('22년)

8) 자연휴양림, 병무민원 등 11종('21년) → 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11종 추가('22년)

【 마무리말씀 】

최근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0월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소위 ‘with 코로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방역상황, 백신접종을 등 방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with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되었던 정책의 재개 검토 등
일상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정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